

2018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긴급 토론회



#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문제점

2018. 11. 19 (월) 오후 4시 기사연빌딩 이세홀

사 회 정대일 박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장)

발 제 이재봉 교수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토론 1 서보혁 박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 토론 2 정육식 대표 (평화네트워크)

## 순서

사회\_ 정대일 박사(기사련 평통위 위원장)

소개와 인사\_ 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발제\_ 이재봉 교수(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평화학)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나 한반도 중립화로“  
3 ~ 8p.

토론1\_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해”  
9 ~ 12p.

토론2\_ 정옥식 대표(평화네트워크)

발제\_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나 한반도 중립화로“

이 재 봉 교수(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1.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망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2018년 4월부터 9월 까지 열린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한-북한-미국 사이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안팎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온 몹시 비정상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크게 네 가지 변화를 예상해본다.

첫째, 1945년부터 유지된 한반도 분단 상태를 끝내고 통일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 무려 73년만이다.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 제1단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은 이미 시작됐고, 제2단계 국가연합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루어질 것 같다. 늦어도 3-4년 사이에 ‘실질적’ 통일까지 실현되리라 기대한다.

둘째, 1948년부터 지속된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끝나게 되었다. 70년만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국제관계에서, 대개 아무리 큰 충격이나 상흔도 한 세대 남짓 흐르면 치유되기 마련인데, 두 세대가 훌쩍 지나서야 적대관계를 풀 수 있게 되었다. 북미 수교를 전후로 북일 수교도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되었다. 무려 68년만이다. 1953년까지 3년간 싸우고 어정쩡하게 멈추거나 (停戰) 쉬고 있는 (休戰) 비정상에서 벗어나 65년 만에 종전 (終戰) 선언과 평화협정을 불러올 수 있게 된 것이다. 1979년 미국과 중국 그리고 1992년 남한과 중국에 이어 머지않아 남한과 북한 및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 같은 상황이 종식된다는 뜻이다.

넷째, 1993년부터 불거진 이른바 북핵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25년간 한반도 안팎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온 최대의 쟁점을 물리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도 없어지는 ‘평화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2. 평화와 통일의 편익과 혜택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실질적' 통일이라도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편익이나 혜택을 맛보게 되리라 기대한다. 크게 여섯 가지만 꼽는다.

첫째, 정치적으로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분단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제한하고 훼손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정부 예산의 15-20% 안팎인 국방비를 줄여 그만큼 사회복지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또는 의료복지 확대 등의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셋째, 사회적으로 이념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에 따라 '친북좌빨'과 '수구꼴통'의 대립과 갈등이 약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리적으로 남한도 '완전한 섬 (完島)'에서 벗어나 '반쪽 섬 (半島)'의 특혜를 누리며 '여행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비행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머지않아 기차나 버스를 타고 평양에 들렀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만주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여행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뜻이다.

다섯째,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20대에 공부하거나 일하다 말고 가장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인 군대에 불려가 2-3년 붙잡혀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리라 예상한다.

여섯째,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에 따라 상존했던 무력충돌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사라져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서해교전 같은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남북 모두 막강한 병력과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터에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멀쩡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변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는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분단이 유지되고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어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구다. 이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심각한 걸림돌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꼽고 싶다. 2018년 11월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 연결 등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배경이나 북미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냉전시대에겐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었지만, 탈냉전시대에겐 평화와 통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 1) 냉전시대 미국과 남한의 일치된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직후 8-10월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멈춘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남침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조약을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기로 한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부터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는 미국과 남한의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가 같거나 비슷했다. 둘 다 대외정책의 핵심이 반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7년 무렵부터 소련과 냉전을 시작했다. 1949년 소련의 핵무기 개발 성공에 이어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1950년 중소동맹이 맺어지자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했다. 아시아에서 반공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4년간 싸웠던 일본을 겨안고 동맹을 추진하면서 소련과 중국에 대한 '봉쇄와 저지'를 강화했다. 남한과 대만도 끌어들였다.

남한은 한국전쟁 전후인 1950년대 초반뿐만 아니라 1960년대까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 뒤졌다. 특히 군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핵무기까지 들여왔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1910년부터 35년 동안 식민통치했던 적국 일본과도 1965년 수교했다. 소련+중국+북한을 겨냥한 미국+일본+남한의 3각공조를 위해서였다.

이렇듯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반공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고 남한은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가 일치했다.

## 2) 탈냉전시대 미국과 남한의 달라진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남한의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

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국가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터에 반공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쟁자는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91년부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며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일본이 재무장을 막고 있는 '평화헌법'을 수정해 '정상국가' 또는 '보통국가'가 되도록 촉구해왔다. 2010년대엔 미국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증강 배치하겠다는 '아시아 회귀 (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 (Asia rebalancing)' 정책을 전개했으며, 남한에 고고도 미사일방어망 (THAAD)을 배치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각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겠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의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가 바뀐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달라진 것은 당연하다. 냉전시대엔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고 봉쇄하며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었지만, 탈냉전시대엔 중국의 급성장과 패권 도전을 견제하고 막는 것으로 달라졌다. 주한미군 기지를 휴전선 근처가 아닌 서해안 평택으로 확장해 이전한 이유다.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꺼리고 평화협정을 거부해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북한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을 잃게 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북한이 오래 전부터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줄기차게 요구해도, '자유와 평화를 앞세우는' 미국이 한사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한편, 남한의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 역시 크게 바뀌었다. 남한은 1990년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1992년 중국과도 수교했다. 분단과 전쟁을 통해 심화한 적대관계를 끊은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과도 손잡아야 한다. 반공 반복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남한과 중국의 관계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한중 교역량은 2003년부터 한일 교역량을 넘어섰고, 2004년부터는 한미 교역량을 초과했다. 2009년부터는 한미 및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의 내용이다. 일본에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해본 적이 없는 가운데 2017년 283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미국에겐 198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7년 179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중국에겐 수교 다음해인 199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온 가운데 2017년 443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남한의 전체 교역량 가운데 약 1/4을 중국이 차지하고, 전체 무역흑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서 국가 이익을 찾을 수 있겠지만, 남한은 중국과의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국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4. 남한의 선택: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나 한반도 중립화로

남한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정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언론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주류 정치세력 못지않게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안팎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달라진 터에 남한은 언제까지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유지를 고수해야 할까. 지난날의 안보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와 이익보다 중시하는 것은 아닐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을 다시 짚어본다. 첫째,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올 것이라고 한 터에 북한을 겨냥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겠는가.

둘째,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앞에서 얘기했듯 한중 교역량이 한미 교역량의 두 배를 넘고 중국으로부터 얻는 무역흑자가 전체 무역흑자의 절반을 넘는 터에 남한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게 바람직할까.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근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정책을 전개하고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정책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제1폭격 지역과 대상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인 평택이 되지 않겠는가.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남한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해볼 수도 있다. 한반도 중립화는 미국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면서 구상하기도 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연방제 통일방안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 토론 1\_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해”

서 보 혁 박사(통일연구원)

### □ 평화체제 이론으로 그리는 한반도 평화

평화체제란 평화를 보호하고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원칙, 규범 및 관련 제도를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주권 평등 규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국제연합(UN)과 평화조약 같은 것이 평화체제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평화의식만 높고 이를 보장하고 실현할 관련국들 간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평화를 회복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평화는 의식과 더불어 그 원칙, 규범과 제도가 어우러질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체제 논의에서 평화는 평화의 보호를 의미하며, 평화의 보호는 평화유지와 평화회복으로 구성됩니다. 평화유지와 관련한 조치로는 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이 있고, 평화회복과 관련해서는 휴전조약과 평화조약 등이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동맹국들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 각기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다른 평화유지 조치인 불가침조약은 아직 남북, 북미 사이에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냉전이 격렬하게 해체되던 1991년 말 남북한 사이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후 사문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화유지(peacekeeping) 측면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평화회복 조치들 중 평화조약이 휴전조약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1953년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조약 체결 없이 지금까지 휴전체제가 지속되어 온 걸 보면 평화조약이 더 적극적인 평화회복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65년에 걸친 장기간의 휴전체제에서 빚어진 깊은 불신과 군사적 대치 상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가로놓여 있어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교전당사국들 사이의 신뢰조성과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공동의 정치적 노력입니다.

평화조약은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 종료를 목적으로 문서를 통해 취하는 명시적 합의를 말하는데, 국제법상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평화조약은 전 시상태를 평화상태로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현상유지 하의 불가침조약과 구별되고, 조

약의 체결권자가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체결권자가 군사령관인 휴전조약과도 구별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평화조약이 평화체제 수립의 최대 관문인 셈입니다. 평화조약의 당사자와 휴전조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이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체결 당사자였던 중국이 군대를 철수하고 적대관계였던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은 자신과 미국 사이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에 가담했고 더욱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은 물론 평화체제 수립의 전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평화조약의 내용은 조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특정 범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대행위를 종료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협정(agreement)은 관련국 대표들 사이의 공식 합의를 말하고, 조약(treaty)은 협정이 해당국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를 말합니다. 협정은 해당국의 정권 교체로 이행이 중단될 개연성이 큰 대신 조약은 그런 우려는 없지만 의회 동의 획득이 쉽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조약, 불가침협정과 같은 국제제도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국 국민들의 평화의식이 높고 과거 적대국가 간 관계가 정상화되어 상호협력의 높아질 때,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 □ 3단계·3차원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을 막아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살고, 나아가 인간답게 살아갈 환경을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교전 당사국들이 평화우호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평화체제 이론에서 말하는 평화회복입니다. 평화회복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평화가 회복되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는 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평화통일, 통일평화로 구분해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회복되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 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공동기구를 만들어 통일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비핵평화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개방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북한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그 형태를 결정해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통일이 달성되면 한반도는 비핵평화에 이어 시장평화, 민주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최종적인 단계, 곧 통일평화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통일평화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제반 노력과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에 난민, 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도 포함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평화에서는 평화구축의 나머지 과제인 정의로운 평화, 우주와의 평화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핵평화를 시작으로 평화통일을 거쳐 통일평화로 나아가는 3단계 연속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체제 비전이 실현가능하려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1단계 평화체제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 과제가 비핵평화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평화를 북한의 핵포기로 축소해 이해하면 비핵평화의 목표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비핵평화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비핵평화의 구성 요소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핵평화의 구성 요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남북·북미관계의 발전입니다. 이들 세 요소들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는 것이 비핵평화의 달성 방법입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높는데 그것은 비핵평화의 목표와 그 내용을 달성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행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만 반복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비핵평화 촉진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1단계 과제인 비핵평화는 다음 3차원의 접근을 동시에 전개하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 노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약한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번째 차원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을 넘어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지속의 모멘텀을 살려가야 합니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논의하고, 정치는 물론 경제, 인도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북미 간에도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유해 송환에 이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미 코리언의 북한고향 방문,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식량·보건 실태 개선 등을 위한 공동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 북미관계가 비핵화 문제

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차원의 논의는 동북아 안보협력이 비핵평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비핵평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 역내 안보와 협력을 활성화 합니다. 과거 6자회담 참여국들이 비핵평화를 지지하고 비핵화를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과 연결 짓는 노력도 유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를 북핵문제 해결로 좁게 보았지만 그것은 비핵평화-평화 통일-통일평화로 이어지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질 때 비핵평화에 더 적극 임할 수 있고, 관련국 정부는 물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로 평화체제의 길을 튼튼하게 닦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 2\_

정 욱 식 대표(평화네트워크)